

2015

연구보고서-8

I S S U E P A P E R

성평등 효과 제고를 위한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연계방안 연구

수행과제명 • 성 주류화 기반 정책 평가제도의 성평등 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과제책임자 • 김경희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성평등 효과 제고를 위한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연계방안 연구*

수행과제명 ■ 성 주류화 기반 정책 평가제도의 성평등 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과제책임자 ■ 김경희 연구위원

☎ Tel: 02-3156-7187

✉ e-mail: kh99kim@kwidimail.re.kr

요약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등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또한 성 주류화 관련제도에 기초한 성평등 목표(안)를 시범분석이 되는 주요 기관별로 제시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고자 함.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경희·남궁윤영·동제연·주경미·이은경(2015). 성 주류화 기반 정책 평가제도의 성평등 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배경 및 문제점

● 이 연구는 한국의 성 주류화 전략의 대표적인 도구로 알려져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성평등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성 주류화는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일반 정책에 성인지적인 관점을 적용하여 성 중립적인 정책을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략임. 그러나 성불평등한 관행과 인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무엇이 성불평등한 것이고 어떠한 정책이 성평등한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처한 불평등한 관행과 인식,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5년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왔고,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시행한 정책이 운영되고 있음.
- 또한 경제, 보건, 복지, 가족 등 8개 분야별로 여성의 참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성불평등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국가성평등지수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는 핵심적인 성 주류화 도구 이면서 국가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동시에 최근에 수립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 국가성평등지수도 국가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면서 성불평등(젠더) 문제를 국가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4개의 제도 모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국가 정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성 주류화 관련제도라고 보여짐.

● UN은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성 주류화를 여성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채택한 이후, 회원국가의 정부에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책무를

부여해 왔음. 성 주류화의 핵심은 주류 의사결정 과정의 성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정책의 시스템과 문화를 새롭게 전환하는 것임.

- 우리나라도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인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서 ‘성 주류화’를 추진 전략의 하나로 채택하였음. 또한 공공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하여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서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2011년에 제정하였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서 적용대상이 사업뿐 아니라 법령과 계획으로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대상과제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4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분석평가는 총 26,438개였다. 그 중 법령에 대한 분석평가가 17,433개로 가장 많았고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173개,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가 8,832개 추진되었음.

- 성인지예산제도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대상과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2015년 성인지예산서’에는 42개 기관의 343개 세부사업에 대해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며, 이를 분석한 총 예산규모는 26조 626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이 적용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분석평가서의 수가 양적으로 늘어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가 두 제도의 목적인 성평등의 효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이 어느 정도 정책환류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성인지예산제도는 사업별로 성과목표를 계량화해서 설정하도록 하여 성과관리를 하고 있음. 하지만 성 주류화 관련 제도를 연계하고자 할 때, 연계에 기초한 결과물과 그에 따른 성과관리는 다를 수 있다고 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로 여성이 처한 현실을 성별통계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 국가성평등지수와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목표와 비전,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제도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이러한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성평등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봄.
-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음. 첫째,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성 주류화 관련제도가 구현하는 젠더 이슈(성불평등 문제), 성평등 개념이 무엇이며 성 주류화 관련제도에서는 성평등 개념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둘째,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젠더 이슈, 즉 성불평등 문제는 무엇이고 분야별로 제기해 볼 수 있는 성불평등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가 왜 필요하며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 주류화 관련제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어야 하는가? 연구진이 제시한 연계의 필요성과 연계방안에 대해 성 주류화 전문가들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다섯째,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 국가성평등지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연계함으로써 이를 부처별로 적용한다고 할 때, 연계에 기초한 성평등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
- 이러한 문제인식을 갖고 본 연구에서는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연계에 기초한 성평등 목표 설정과 관련제도의 연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성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 일반국민 대상의 성별격차 중요도 설문조사 결과

- 이 연구에서는 만 20세~6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평등 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성평등지수의 8개 분야인 경제활동, 가족,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건강·보건, 복지, 안전, 대표성(의사결정)의 성별격차에 대한 체감도 및 성별격차 문제 해소 요구정도를 조사·분석하였음.
- 각 분야별 성별격차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 정도인 체감도는, 모든 분야의 성별격차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의 체감도가 높았음. 성별격차 체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분야를 순위별로 보면, (1) 경제활동→(2)안전→(3)대표성(의사결정)→(4)가족→(5)교육·직업훈련→(6)복지→(7)건강·보건→(8)문화·정보 순이었음.
- 경제활동 분야 내 주요한 성별격차 중에서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체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성별격차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성별격차 해소 요구정도도 체감도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해소 요구정도가 남성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높았음.
- 국가성평등지수 8개 분야의 성별격차 해소 요구정도를 순위별로 제시하면, (1)안전→(2)경제활동→(3)가족→(4)복지→(5)대표성(의사결정)→(6)교육·직업훈련→(7)건강·보건→(8)문화·정보 순이었음. 안전 분야 내에서는 ‘여성의 성폭력 피해 증가’,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증가’와 같은 성별격차에 대한 해소 요구정도가 높게 나타났음.
- 국가성평등지수의 8개 분야 이외에 성별격차 해소가 고려되어야 할 분야로는 ‘주거(미혼모나 여성독거 노인의 주거문제)’분야가 57.9%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가로등 밝기 등)’→‘시설·설비(남성 신체에 맞게 설계된 농기구 등)’→‘교통(남성의 키 높이에 맞추어진 지하철 손잡이 등)’순으로 나타났음.

■ 전문가 대상의 연계방안 의견조사

- 본 조사는 성 주류화 관련제도와 연관된 전문가 60인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성별 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제도,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국가성평등 지수의 운영목적 및 성과관리를 점검하였음.
 -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분석대상(정책)범위, 성과측정 범위, 방식 및 연계 구조를 살펴보았음. 먼저 운영목적을 살펴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공공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성차별 개선’이 가장 주요한 운영목적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 제도의 경우 ‘공공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예산편성을 통한 정책개선’으로 나타났음.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운영목적에 대해서는 ‘성평등한 사회의 실현’이, 국가성평등지수 운영목적과 관련하여 ‘성별격차의 정도를 파악’이 가장 주요한 운영목적으로 나타났다.
 - 이를 통하여 성 주류화 관련제도들의 목표가 효율적 관리나 관리자의 인식향상에 있기보다는 성평등한 사회의 실현이라는 보다 궁극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함을 알 수 있음.
-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성과관리 기준에 관하여 전문가들은 정책의 환류 및 연계와 객관적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정책개선의 사례 관리’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부처별 성평등 목표는 양성평등정책기본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에서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를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통해 정책의 환류와 제도별 연계의 중요성을 성과관리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성인지예산제도의 경우 ‘성인지 결산서의 성과 목표 달성률’을 성과관리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국가성평등지수의 성과관리 기준의 경우 ‘영역별 성평등 수준 파악은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지표 활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기술적 연계방안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전문가들은 두 제도 연계를 위해 대상정책의 연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정책은 ‘성별격차가 큰 과제’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성인지예산제도의 경우에는 ‘성별영향 분석평가 후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한편 대상정책은 두 제도의 연계를 위해 모두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지표와 관련하여 성평등 목표설정 항목을 신설(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예산반영 필요 사유와 요구액 항목을 신설(성인지예산제도)하여 효과를 분석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 제도의 연계를 위한 운영과 관련하여는 여성가족부가 두 제도를 연계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또는 조직을 신설할 것과 성인지 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젠더전문가가 컨설팅을 담당하는 것이 제도 연계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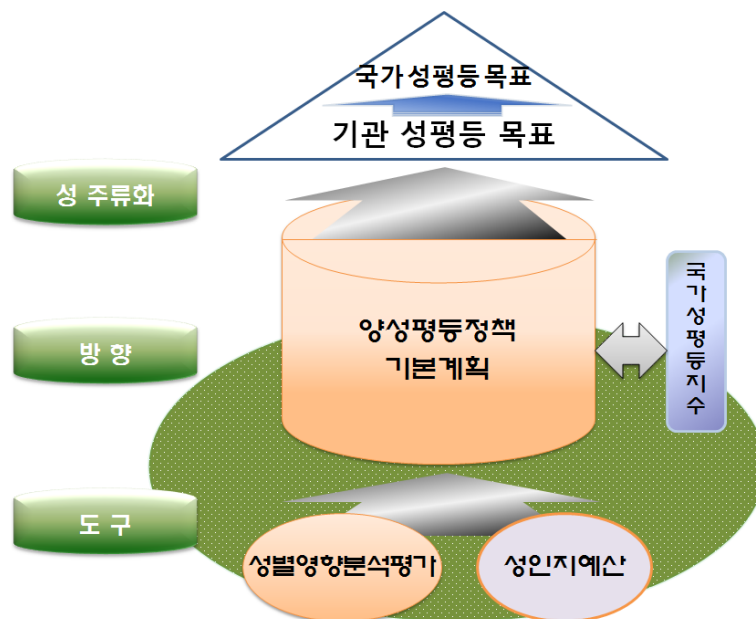
■ 부처별 성평등 목표설정을 위한 시범분석

●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주요 부처 5개(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목표(안)를 시범적으로 분석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부처별 사례는 다음의 방식으로 분석되었음.

- 먼저 국가성평등지수를 통해 부처의 개괄적인 성평등 이슈를 파악했음. 부처 관련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 및 지표들은 각 부처의 개괄적인 성평등 상황을 알려주었지만, 부처가 소관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성평등 이슈를 보여주지는 못하였음.
- 둘째, 기본계획의 정책과제(중과제)를 기준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사업들을 연계하여 살펴보았음. 그런데 모든

부처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의 사업들이 부처 소관의 특정 사업분야에 쏠리고 있었음. 이는 향후 정부부처가 다양한 분야에서 성평등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 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분야를 적극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하는 것임.

- 마지막으로 기본계획의 정책과제(중과제)별로 구체적인 성평등 이슈를 분석한 후 부처의 사업 관련 성평등 이슈를 제시할 수 있었음. 결국 부처별(기관) 성평등 목표는 국가의 성평등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임. 각 부처의 성평등 목표는 국가차원의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구성요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며, 개별적인 사업에서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는 기준이 될 것임.



[그림]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연계와 성평등 목표의 설정

- 각 부처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업별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게 되면 부처 고유의 기관별 성평등 목표로 그 결과가 종합되고, 결국 정부부처의 성평등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각 부처의 성평등 목표와 함께 사업별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게 되는데,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연계에 기초해서 설정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음. 즉, 성별 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연계에 의해서 동일한 사업이 분석 대상 사업으로 정해질 경우 사업별 성평등 목표를 공유할 수 있을 것임.
- 무엇보다 설정된 성평등 목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성평등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기능에 부합하는 기관별 성평등 목표가 적절하게 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부처의 성평등 이슈의 개발을 통해서 구성된 성평등 목표들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 이와 관련된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추진체계가 필요함.
- 독립적인 추진체계에 의하여 성 주류화 관련제도를 실행하고 관리하는 것은 성 주류화를 촉진하는 것이며, 결국 정부의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3 정책제언

■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개념적 연계방안

- 연구결과 제시하고자 하는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연계방안은 다음과 같음.
- 양성평등기본계획과 국가성평등지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은 제도운영의 일차적 목적이 성평등 증진에 있다고 볼 때, 제도운영의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진 개념적 연계가 필요함.
- 이러한 개념적 연계는 각 제도운영에 따른 결과물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연계된 결과물을 관리함으로써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연계를 통해서 성평등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다른 한편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은 성 주류화의 핵심 도구로, 두 제도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연계에 초점을 두었으며 두 가지 접근의 연계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① 제도연계 목적의 법적 근거 마련 :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

- 국가성평등지수,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은 모두 성평등 증진을 공통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 주류화와 양성평등 간의 관계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
- 이에 관련조항의 개선내용을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또한 성평등 목표를 국가차원과 기관차원에서 설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 정부가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성평등에 대한 책임성을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② 성평등의 구체화와 성평등 목표의 관리

- 성평등 개념은 추상적이고 다의적이며 이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을 공공정책에서 실현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성평등 목표 뿐 아니라 기관차원의 성평등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임.
- 스웨덴의 경우 각 부처의 장관이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성평등 목표를 언급하고 있음. 전문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관리 기준으로는 1차와 2차 조사결과 모두 ‘정책개선의 사례 관리’가 응답의 우선순위 총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어서 ‘해당기관의 정책개선 반영률 파악’, ‘해당기관의 정책개선 의견 수용률 파악’의 순으로 나타났음.
- 또한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를 관리하는 기준으로는 조사결과

‘성인지 결산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응답의 우선순위 총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정책개선의 사례관리’, ‘성인지 예산의 예산규모 파악 및 관리’, ‘종합분석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표’ 순으로 응답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성평등 목표를 관리하는 기준으로는 부처별 성평등 목표를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로 나타났고 이어서 ‘부처별 성평등 이행실적은 목표 대비 이행여부와 정도로 관리’, ‘부처별 성평등 이행실적은 언론에 보도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순으로 나타났음.
- 이에 성 주류화 관련제도를 연계하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성평등 목표의 관리방식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경우 이행실적점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개선의 사례관리, 성인지 예산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성과목표를 통해서 성평등 향상의 정도를 관리할 수 있을 것임.

■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기술적 연계방안

① 기관별 성평등 목표의 설정과 활용

- 성평등 목표는 국가차원의 성평등 목표와 기관차원의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기관차원의 성평등 목표는 상위목표와 함께 하위목표의 설정을 통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사업에서 성평등 목표를 설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기관별 성평등 목표의 하위목표는 성 주류화 관련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사업에 대해 성평등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성평등 목표의 하위목표는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중과제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성 주류화 관련제도를 시행하면서 기관별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은 성인지예산뿐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작성해서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

보고서의 양식을 개선함으로써 성평등 목표를 포함할 수 있을 것임.

② 국가성평등지수·성별격차 해소요구를 반영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야별 성별격차 해소 요구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해소 요구정도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체감도가 높았던 현상에 대한 성별격차 해소 요구정도가 높았음. 8개 분야별로 성별격차 해소 요구정도가 높았던 분야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안전, 경제활동, 가족, 복지, 대표성, 교육·직업훈련, 건강·보건, 문화·정보 순으로 나타났음.
- 향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할 때는 국가성평등 지수가 낮은 영역 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성별격차 체감도, 성별격차 해소 요구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젠더 이슈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조사결과와 활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형성해 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짐.

③ 성평등 효과 제고를 위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과 작성항목의 개선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전문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연계성을 위해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예산반영 필요 사유와 요구액’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음.
 -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과의 연계성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분석항목에는 성인지 예산 반영을 포함하면서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반영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또한 그 내용이 2016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성인지 예산서 양식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음.

④ 전문가 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추진일정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대상과제를 동일한 사업으로 선정할 경우, 성별관련성이 높고 젠더 이슈를 도출할 수 있는 대상과제를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먼저 선정하고 해당사업을 성인지예산에 포함하면서 분석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정책개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두 제도를 연계할 수 있을 것임. 두 제도 연계에 기초한 컨설팅의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부처별 대상과제의 선정(1-2월) :
 - 해당부처의 관련자료(주요 업무계획, 예산설명서 등)을 확보하여 검토한 다음 대상과제별로 선정근거를 제시한 목록을 작성
- 분석평가서의 작성 지원 :
 -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지원(3-4월)
 -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원(5-6월)
- 종합결과보고서의 작성 지원(다음년도 2월, n+1)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인지 예산에 반영
-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지원(n+2)

⑤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여성가족부 내 성별영향분석평가국의 신설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연계에 기초한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여성담당부서)가 두 제도를 연계할 수 있는 TF 또는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항목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음. 무엇보다 두 제도의 연계를 강화할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서는 분석기능이 강화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성인지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정책개선 및 정책환류에 대한 점검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현재 성별영향평가과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자가 7명에 불과하며 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임.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연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 내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인력이 늘어나야 할 것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심으로 두 제도를 연계할 경우 여성가족부 내에 성별영향분석평가국이 신설되어야 할 것임.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국에는 정책영역별로 분석평가과(고용분야분석평가과, 복지분야 분석평가과 등)를 두어 국가성평등지수,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을 상호 연계시켜서 성평등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4 기대효과

- 이 연구는 정부가 수행하는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성평등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연구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 성 주류화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관련제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연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제도운영의 목적인 성평등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둘째, 성 주류화 관련제도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 셋째, 일반국민에 대한 8개 영역별 성별격차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함으로써 성별격차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체감도를 비교하고 문제해결에 관한 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성불평등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성별영향분석평가제

도에 반영함으로써 이 제도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넷째, 연구를 수행하면서 16개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성별 영향분석평가센터, 지역 컨설턴트, 성 주류화 관련 공무원들,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임.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과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